

---

碩士學位 請求論文

21世紀를 對備한 靑少年 倫理·道德教育의 方向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 教育專攻

申 鎬 仁

1995年 8月

# 21世紀를 對備한 青少年 倫理·道德教育의 方向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申 鎬 仁



申鎬仁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7月 日

審查委員長  
審查委員  
審查委員

安 永 範  
高 性 俊  
鎬 性 俊



〈 초 목 〉

## 21世紀를 對備한 倫理·道德教育의 方向

申 鎬 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지금 우리는 새 시대의 목전에 서있다. 인류 사회는 과학 기술의 경이적인 발달로 인해 첨단 정보 통신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일고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될것이라고 예언한다. 200년간 계속된 서구 중심의 대서양 시대가 끝나고 동아시아 중심의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간교육의 분야는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는 오늘의 청소년이 주역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제반 가치의 중심이 반드시 인간적인 것이 아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또 사회변화도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만을 초래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인간교육은 미래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한다.

이와같은 인간성 문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21세기를 대비하는 윤리·도덕교육은 바람직한 사회가 되도록,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고쳐나가는 것과 21세기에 가치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익혀가는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의 과제는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기본덕목의 습관화와 생활화,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과 실천, 그리고 윤리적 사고력의 신장이라 하겠다. 한국의 21세기는 정치·경제·문화·환경·통일등 생존과 관련된 수많은 가치갈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포괄성, 합리성, 공감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두어야 한다.

# 目 次

<抄 錄>

I. 序 論 .....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2
II. 21世紀와 韓國社會 .....	4
1. 21世紀 社會의 一般的 特徵 .....	4
2. 21世紀 韓國社會의 모습과 問題點 .....	10
III. 21世紀에 對備하는 倫理·道德教育의 課題 .....	19
1. 未來 對備的 倫理·道德教育의 性格과 課題 .....	19
2. 21世紀 對備 倫理·道德教育의 3대 指向點 .....	22
IV. 21世紀를 對備한 倫理·道德教育의 內容 .....	34
1. 바람직한 價値·덕목 .....	34
2. 教育內容의 體系 .....	45
V. 結 論 .....	72
參考文獻 .....	75
Summary .....	81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오늘날 인류 사회는 과학기술의 경이적인 발달로 인해 情報通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으며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동서 냉전 구조의 와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정치,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약 200여 년간 계속된 서구 중심의 대서양 시대가 끝나고 곧 동아시아 중심의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sup>1)</sup>

바야흐로 우리는 새 시대의 목전에 서있다 하겠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영향권으로 진입하였으며 따라서 많은 전환기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0세기의 남은 기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의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교육 분야의 과제는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회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술의 발달은 제반 가치의 중심이 반드시 인간적인 것이 아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또 사회 변화는

---

1) 정세구(1993), "21세기에 대비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윤리 도덕교육",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3.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인간 교육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현재의 청소년들은 소위 '청소년기'를 맞고 있다. 靑少年기란 人間發達 과정에서 그들의 주체 형성에 가장 重要한 時期이며 한 인간의 生物學的, 心理的, 社會的, 家庭的 및 倫理規範등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人間の 完成을 기하고 社會人으로서의 기능을 취하기 위한 準備段階이다.<sup>2)</sup>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에 바람직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인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급격한 기성 사회의 가치관 변화, 냉엄한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제도와 규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살, 폭력 등의 탈선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X세대라는 말로 대변되는 기존 가치체제와 문화에의 저항 현상 또한 만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과 현상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이 21세기를 맞이하여 그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들이 맞이하게 될 한국의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과 사회윤리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윤리·도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윤건영(1991), "21세기를 대비하는 도덕·윤리 교육의 과제", 한국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P.321.

- ①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20세기와 비교함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 ②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지금의 시대적 성격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가?
- ③ 21세기의 윤리·도덕은 어떻게 변해가며 그 변화에 대응하는 윤리·도덕 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
- ④ 21세기에 맞는 덕목은 무엇이며, 인간교육,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달라질 것인가?
- ⑤ 통일 시대가 도래하는 21세기를 맞이할 가장 적절한 통일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이와 같이 本 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특징을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화되는 일반적 특징과 한국사회, 특별히 선진화를 눈앞에 둔 정치·경제적 측면과 통일 시대를 열어 갈 한국사회의 모습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변질된 도덕성이 인간소외 현상을 불러왔고 天倫을 저버린 사건이 계속되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으로 윤리적 사고능력과 도덕성 회복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도덕의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덕목교육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덕목을 살펴보고 人間性 恢復과 환경교육을 통해서 인간교육을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민주시민 역할을 검토했으며 눈앞에 다가온 통일을 위해 통일시민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했다.

本 論文의 연구 방법은 21세기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국·내외 제 논의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는 문헌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21세기와 관련한 國民倫理·道徳科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요약, 비교 분석을 가미하였다.

## II 21世紀와 韓國社會

### 1. 21世紀 社會의 一般的 特徵

21세기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다음 세기에 들어서면 인류 사회의 집단적 능력은 온 인류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누적된 기술의 발전 덕택이다. 20세기의 100년 동안 사람들은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로 이제 인간은 식량, 주거, 연료, 의료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또한 인간은 문명 시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으며 그 공동체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한 소수 지배자의 자의와 횡포 속에서 시달려 왔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지속된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마도 다음 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세계 모든 인류가 독재자의 학정에서 해방될 것이다. 압박과 피압박의 정치적 구조는 자율의 체계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해방사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21세기를 인간 해방의 完成世紀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으로부터의 해방, 독재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내다보기 때문이다.

과연 21세기는 모든 인류가 고르게 복지를 누리며 자유를 가지는 행복의 세기가 될 것인가? 그러나 미래를 단순히 밝게만 볼 수는 없다. 행복한 세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류가 가지게 된다는 것과 실제로 행복한 사회를 만



들어 낸다는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엔진을 가진 차는 고속으로 많은 사람과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만일 조향 장치가 고장나서 아무도 制御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오히려 타고 있는 사람을 해칠 뿐,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다준 엄청난 능력도 인간이 바로 관리 통제 할 수 없게 된다면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멸의 정도도 심해지게 된다. 조향장치가 고장난 차는 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기술 능력도 통제를 벗어나면 인류사회를 멸절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21세기는 인류가 자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겨 주는 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와 불안의 세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21세기는 인간 해방 완성의 세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인류 멸절의 세기,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기대와 불안이 함께 존재하는 시대, 그것이 21세기가 가지는 전반적 특성이라 하겠다.<sup>3)</sup> 그렇다면 21세기의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이를 밝히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는 앨빈 토플러의 『권력의 이동』 피터 트러커의 『새로운 현실』, 존네이스 비트의 『메가 트렌드 2000』, 그리고 사무엘 헌팅톤의 『강대국의 흥망』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들은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시대'가 거대하고 급속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측한다.<sup>4)</sup>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모습은 그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두드러진 몇 가지 경향을 기존 학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겠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시

3) 21세기 위원회(1992),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 PP.10-11.

4) 국방부(1995), "세계화, 새로운 跳躍", 월간 국방, P.88.

대 각국은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였으며 국제교류 범위도 제한적이였다. 그러나 동·서냉전구도의 와해와 교통 통신의 발달 등 인류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적 국제교류는 급증하였다. UR의 타결로 '95년에는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상품·자본·기술·서비스 등 모든 경제재 및 요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간 혹은 기업간 무한 경쟁 시대를 열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EU, NAFTA, APEC 등의 지역간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는 협력과 대결·경쟁 속에 예측 불허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세계가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지구촌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시대를 열게 함과 동시에 교통·통신·전자·정보 문명의 발달은 국가간·지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속에 세계를 하나로 묶어 준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온 세계인들이 동시에 보고 느끼고 고민하는 시대가 온다. 지리적으로 우리의 반대쪽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변화나 교류가 비교적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괴질이 즉각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분쟁이나 국제 환경오염 문제 등등의 현상들은 더이상 우리 나라 밖의 문제나 남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셋째, 高度의 '情報文明社會'의 到來이다. 소위 '情報化 社會'로 일컬어지듯이 오늘날 전자·정보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 기능을 컴퓨터등 기계 장치가 모방, 대체·보완하며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 보통 사람보다 계산력과 기억력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난 컴퓨터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 수행하며 인류생활을 더욱 편하게 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생겨나 사회문제화 될 소지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정보 소유의 수준에 따라 부와 권력이 집중 편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넷째, '政治的 分權化 時代'가 열리고 있다. 대체로 인류역사는 문명이기의

발달에 따라 권력이 하향화·분권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점차 지방으로 이관되는 소위 '地方化'경향이 分權化의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조직체에 집중된 권력은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분산되어 民의 힘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民의 정치적 참여 의식 증대 현상 등으로 잘 나타난다.

다섯째,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이 深化되고 있다. 각종 인류문명 이기의 발달은 과거 인류의 걱정과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주었지만, 그 대가로 더 해결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와 위험성을 떠 안게 되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에이즈·에볼라 라는 신종病 이라든가 지구 전체를 공멸시킬 수도 있는 核문제, 심각한 環境破壞등의 문제는 인류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쩌면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인류역사는 불가피하게 자기 파괴의 종말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고 밝힌바 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sup>5)</sup>

21세기 산업 사회에서는 정보에 의해 산업 사회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미래 산업 사회의 특징을 전·후 산업 사회와의 관계를 <표-1>의 도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국방부(1995), 상계서, PP.87-89.

<표 1> 산업사회의 특징

형태	구분	산업전 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생산방식		자원채취	상품제조	정보처리(계속적)
경제부문		제1차 농업 광업 어업 임업 석유가스	제2차 재화생산 제조업 내구재 비내구재 대규모건설	제3차 제5차 수송 보건,교육 공익사업 연구,정보 제4차 레크레이션 무역 재무 보험 부동산
자원의 변형		자연력 바람,물,가축,인력	인공에너지 전기-석유,가스,석탄, 원자력	정보 컴퓨터 및 자료 전송시스템
전략적 자원		원재료	금융자본	지식
기술		수공업	기계기술	지적기술
기능요소		직공,수공업노동자,농부	기술자,숙련노동자	과학자,기술적·전문적 직업인
방법론		상식,시행착오,경험	경험주의,실험	주상적이론,모형,시뮬레이션,의사결정이론,체제 분석
시간적 전망		과거에의 지향	임기응변의 적응, 실험적 현실	미래지향:예측과 계획
설계		자연에 대한 게임	인간간의 게임	인공적 미래에 대한 게임
핵심원리		전통주의	경제성장주의	전문주의

한편으로 미래의 문제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인데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는 미래사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다.<sup>6)</sup> 첫째로 발전 단계로 볼 때 미래사회는 현재의 산업문명과는 다른 단계에 있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단계론 으

6) 황정규 (1989) 미래사회의 가치관 『가치관 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PP.66-71.

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과학기술의 경이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를 막연히 후기 문명사회 또는 후기 산업사회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미래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불안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로 산업문명의 변화 속도가 매우 급격해 지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의 변화로 장차 닥쳐올 30년 사이의 변화가 과거의 2세기 ~ 3세기의 변화에 필적할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 지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것 또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짧은 기간에 급속히 이루어 지게 되는 변화에 의한 '최대위기'의 발생을 예고한다. 셋째로 불만이 증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그것들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者, 이용할 수 있는 者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者 사이에 불만이 차츰 첨예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가지 욕망이 만족되면 또 다른 욕망을 계속 창출하는 인간형을 산출하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째로 결핍감이 증대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만큼 그에 따라 동시에 새로운 여러가지 형태의 결핍 및 결핍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것은 시간의 결핍, 인정의 결핍, 지혜의 결핍, 영향력의 결핍, 안정성의 결핍 등이다. 다섯째로 탈 이데올로기 시대가 됨으로서 19세기,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단절된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로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미래 조작 가능성의 비약적 증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곱째로 인간의 재발견, 인간 회복에 대한 재 해석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 2. 21世紀 韓國社會의 모습과 問題點

### 1) 人類社會의 普遍的인 側面

21세기 한국사회는 인류사회 보편적인 모습과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20세기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바람직한 면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동시에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그 문제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한국사회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고도의 정보교환은 물론 국민들 간에도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는 동시에 정보의 집중과 고도화로 인해 소수가 다수를 쉽게 지배하게 되고 사생활이 침해당하게 되며, 정보기기에 대한 지나친 신뢰나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되고, 문화적 종속 현상이 경제적 종속까지 초래하여 새로운 식민지배와 피지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는 20세기에 이룩한 정치적 민주화의 성과가 심화되어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물론 민주화는 세계적 흐름이며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도 냉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이미 권위주의 적 정치집단, 태도, 관행에 의한 인권의 희생이나 강압적 통치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지방자치의 봉사와 더불어 참다운 주민자치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정보화와 맞물려 대중의 여론을 조작 가능하게 함으로

---

7) 윤건영(1991), 전제서, PP.320-330.

서 합의의 지배의 형식을 통하여 새로운 독재를 겨냥하게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지나친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로 인해 공동체 정신이 약화될 수도 있어서 이 같은 무관심의 증대로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셋째, 한국사회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자유경쟁과 경제 우선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확대, 심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 20세기에 비해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량소비와 거대 도시화에 따른 물자의 낭비, 이기주의 만연이 지나친 경쟁의 초래와 물질적 가치관과 쾌락주의의 팽배 등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밖에 한국사회는 思想的으로 民族主義的 態度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生活 樣式은 國際的이 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사회의 모습도 변화될 것이다.

## 2) 統一 韓國의 側面

다음으로 21세기의 한국사회는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으로 1990년대에 들어 나타난 국제사회의 변화 추세와 남·북한의 내·외적 변화를 볼 때 가능하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념적 대립에서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갈등이 예상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한반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 모두에게 압력 수단이 되어 그 변화에 적응하

8) 김병로(1995), 세계화와 통일한국 『계간사상』, P.216-217.

도록 하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보면, 북한의 이념적 근거인 사회주의 체제가 전세계적으로 붕괴 되거나 그 영향력이 감소됨으로서 고립을 벗어나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성립과 존립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후견인이었던 소련과 중공이 개방과 개혁 정책을 취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존립이 어려워졌고 최근의 경제적 곤란은 일시적인 보수화, 강경화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단계적 변화에 의한 통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sup>9)</sup>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1980년 이래 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연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 안에 대해서는 김일성주석의 1991년도 신년사에서부터 그 내용을 수정하는 자세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남북한 두개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독립주권국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국가연합 형태로 제안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이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대한민국과의 공존을 표명한 셈이다. 나아가서 1991년 12월 13일에 서명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통해 앞으로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협의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사태 진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1991년을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진정한 진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4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한 관계의 해빙기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한국측의 통일노력은 북한의 완고한 저항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 당국자는 그 동안 한국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여겼으며 남한을 통치하는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통일을 위한 협상조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러던 북한정부 당국이 1991년 12월에 이르러 드디어 한국정

9) 21세기위원회(1992), 전제서, PP. 318-319.



부와 협상할 뜻을 밝히고 통일까지의 남북한 공존 체제에 동의하고 나섰다.

어쨌든 분단 50년이 가까워 오는 이 시점에 이르러 드디어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의 기운은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 세기에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sup>10)</sup>

또한 한국은 세계화 추세에서 낙오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의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정통성과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정책을 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통일한국의 출현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1세기에 한국이 통일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언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 사회는 통일과정의 사회와 통일 이후의 사회라는 두 가지의 단계적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 과정의 단계는 현 사회 모습의 연장이므로 생략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 이후의 사회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가능성들 중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연장선상에서의 통일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정치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념·제도·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한국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sup>11)</sup> 그리하여 함께, 자유롭게,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로서 자율적 참여의식에 의한 자율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회는 하나의 단계로서 완성되어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요한, 지속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1세기 위원회(1992), 상계서, PP.318-320.

11) 21세기 위원회(1992), 상계서, PP.326-337.

21세기에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지금에 비해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통일이후 한국은 우선 한민족이 함께사는 사회가 될 것이며 시민 각자에 관한 각자의 價値와 自由가 급증되는 가운데 대등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이고 타의에 의한 제한이 가해지는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참된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다원주의와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혼란스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설령 한국사회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이 이루어 졌다해도 남·북한의 기존 정치사회의 여러 분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주장되거나, 무리하게 절충하려 할 수도 있고 지역간 대립도 상당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체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형상의 통일은 완성되나, 오랜 분단 기간동안 진행된 이질화로 벌어진 남·북한 주민의 의식차이를 극복하는 문제 등은 계속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국가 및 사회 조직체의 통합조정, 생활양식의 동질화, 대외 관계의 재조정 등도 과제로 남는다.<sup>12)</sup>

이론적으로도 새로운 이념들이 나타나 영향력을 갖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하여 경제적인 면은 비교적 뚜렷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적 추세와 현재의 한국 경제가 지향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통일된 이후의 경제적 측면은 통일 후유증을 극복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아 질 것이다.<sup>13)</sup>

서기 2000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북통일은 한국사회

---

12) 이상우(1995),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통일한국의 미래상",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 P.17.

13) 21세기 위원회, 전게서, PP.144-146.

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경제적인 면을 예로들면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북한체제 붕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는 한국 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중국의 동북부 3성(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과 남북한이 합쳐서 인구 1억6000만 명의 한국경제권(또는 발해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한국기업들도 여러 산업에서 세계 10위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인 정부주도형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더욱더 중요시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경제에서의 외국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정부가 점차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기업을 다스려야 하는 시기가 닥쳐올 것이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도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변수가 될 것이다. 경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일은 아마도 21세기에 들어가서나 눈에 띄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때에는 정부가 경제운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보호 교통문제 주택 사회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다. 현재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경제철학이나 또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원색적 자본주의는 당분간 국민의식 속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하며, 생산을 희생하더라도 환경을 보전해야겠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리라고 믿어진다. 아직 환경보전은 말로만 하고, 나에게 피해가 없을 때만 하는 추상적인 것이나, 그것도 페놀 사고와 같은 몇 건의 대형사고가 나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00년 전후에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의식 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근로의식도 어느 정도 약화될 것이며, '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력도 어느 정도는 약화될 것이다.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와

는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성장과 복지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도 사원들, 특히 젊은 층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며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21세기에 가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의 중요 환경변화와 그들이 미칠 영향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2>이다.

<표 2>경제·기업 관련 환경변화와 그 영향 전망

주요 환경 변화	시 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
지구화추세 (국내시장의 개방)	계속(2000년경 거의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시장에서의 외국기업의 비중증가, 국제기업협력의증가</li> <li>· 국내기업의 전문화</li> <li>· 기술과 혁신능력이 기업성패를 좌우</li> <li>· 기업의 국제화 증가</li> </ul>
정보혁명	2005 - 2010년경 정보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관리자층의 축소</li> <li>· 기업의 분권화와 분산</li> <li>·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증가</li> <li>· 공장 사무실 유통업 등에서 자동화증가</li> <li>· 노동집약적 산업 재기 발판 마련</li> </ul>
북한체제의 붕괴	2000년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경제권에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 3성까지 포함</li> <li>·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li> <li>· 사회적 문제 증가</li> </ul>
정부의 규제 완화	점진적 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역할의 점진적 변화</li> <li>· 사회보장과 복지기능 등의 강화</li> <li>· 북한붕괴도 정부기능 확대</li> </ul>
환경,삶의 질로의 가치관 변화	점진적 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제일주의 가치관 변화</li> <li>· 환경,삶의 질의 중요성대두 · 환경산업 등새로운 성장산업의 등장</li> </ul>

끝으로 생활양식의 면을 예측해 보면 기술 혁신과 정보사회로의 이행 및 인구의 고령화, 지방시대의 도래, 국민육구 수준의 향상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첫째,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sup>14)</sup>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핵가족화는 산업화의 심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1세기에는 보편적 현상이 될 것이다. 핵가족화는 초혼 연령의 상승, 산업화에 의한 1, 2세대의 동거 불가능 등, 가족 구조상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의식의 변화 등에 의해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전반, 예를들면 노인, 여성, 아동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 가족 윤리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윤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가족화는 중산층의 저하에 의한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여성의 자립화와 관계 깊다. 이는 역시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일과 여가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간이 줄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21세기에는 일과 관련하여 불태 공장 및 사무자동화 등으로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노동현상이 나타나며 따라 생활양식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형태의 변화는 바로 여가 시간을 확대하게 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특히 고령자의 여가 활동 증가는 복지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정부 재정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의·식·주와 관련하여 보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고도의 소비사회가 될 것이다. 주택의 규모가 커지고 보급률은 높아질 것이나 이에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식품에 대한 질적요구가 높아지나 공급의 증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衣生活의 면에서는 고급화되고 증가되는 양상을 보일

14) 21세기 위원회, 전제서, PP.192-200.

것이다. 한편 오락, 여행, 교육 등이 중요시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생활양식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意識의 변화로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III. 21世紀에 對備하는 倫理·道德教育의 課題

#### 1. 未來 對備的 倫理·道德教育의 性格과 課題

전환기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태도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하나는 체념적인 것이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에서 부터 현실 도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전환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다. 산업사회의 발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간을 정치적·물질적인 것으로 해방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발달된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강화시키고 인간성을 왜곡 시킬 수도 있다. 적극적인 태도는 우선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도록 노력한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에서 부터 파생되어 나갈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대비는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장애를 받지 않고 제대로 나타나도록하고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교육은 장래를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 자체내에 장래 대비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장래에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있게 마련이다. 나아가서는 예상되는 장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특히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많아지게 된다. 윤리·도덕교육

또한 우선은 현재의 윤리·도덕적 상황을 개선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연속적 의미에서 보면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변화 되었을때 그리고 사회환경이 변화 되었을때에도 늘 윤리·도덕성에 기초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전환기적 상황에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윤리·도덕교육도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경제적인 면을 선두로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선진국에 못지않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신적 면에서 인간소외현상 등 급격한 産業化와 사회변동에 따라 여러 이념적·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윤리·도덕교육은 그러한 미래에 대비하는 성격을 갖어야하며 그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도덕교육은 미래에 가서가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것이며 그 과제 또한 來日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는 현재에 기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미래는 바로 10 ~ 20년 후의 사회이므로 그 사회의 주체가 될 지금의 청소년들이 바로 교육의 대상자 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윤리적 측면에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未來社會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윤리·도덕교육의 性格과 課題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정세구 교수가 지적한 것중에서 몇가지 과제를 들어 보겠다.<sup>15)</sup>

---

15) 정세구(1987), "국민윤리교육의 미래적 성격과 과제", 『국민윤리 연구』 제 25호 한국국민윤리학회, PP.344-347.



첫째,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 미래 사회에는 상당한 수 로의 민주적 정치발전이 이루어 지겠으나 그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民主主義的 意識을 형성시켜 주고 동시에 민주적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윤리의식 및 지적 능력을 진작시켜야 한다. 情報化와 世界化에 의해 고도로 산업화된 우리의 미래가 바람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제적 윤리의식과 지적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그에 수반되는 행위 준칙·지식등을 심어 줌으로써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우며 타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윤리·도덕교육을 통하여 고도산업 사회에 대비한 경제적 윤리의식의 기초만은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民族的 政體性을 확립시켜야 한다. 21세기의 우리사회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고 대외적인 문화교류가 증대될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류공동의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다른 문화 집단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民族文化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이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民族的 政體性이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민족적 정체성을 잃고 우리 문화의 독창성 또한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문제는 통일의 이념으로서 그리고 통일후의 갈등을 치유할 소재로서 민족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한국민족으로서 정체성과 韓國文化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갖게 하고 전통적 윤리의식과 예절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人間中心的 의식구조 및 바람직하고 合理的인 가치 판단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21세기의 우리사회가 보편적인 인류의 미래 사회처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진보를 이룩하여 지금보다 더 자유스럽고, 더 풍요하고, 더 편리한 다시 말하면 더 살기좋은 사회가 될 터이지만 동시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게 될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과 산업의 합리화가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그에 따라 인간소외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인적 인간의 실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전인적 인간의 실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전인적 인간에 접근되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의 창조력을 수호하고 신뢰하면서 인간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그에 따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미래사회에서는 가치·윤리적인 문제가 지금보다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세구 교수는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도덕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첫째, 국가·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의 조화 둘째, 보수와 혁신의 조화라는 두 가지를 제시 하였다.

## 2. 21世紀 對備 倫理·道德教育의 3대 指向點



### 1) 기본덕목의 생활화

人間은 社會的 存在이다. 인간은 사회속에서 태어나 그 사회의 영향을 받고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로서의 제반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화 함이 요구된다. 이를 人間生活의 기본 德目이라 할 것이다. 사람은 늘 사회속에서 의미를 갖게 됨으로 그 사회가 어떠한가에 앞서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덕목이 윤리·도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기본덕목을 몸에 익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윤리·도덕교육은 이념 위주의 윤리·도덕교육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덕목을 고정하여 주입하고 습관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社會 체제·제도를 고정화시키며 변화의 대비를 교란케 한다. 또한 타율적 요소가 강하므로 자유의 주체로서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려는 윤리·도덕교육의 기본적 목표에도 위배 되기 때문이다. 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늘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타율적이며 그 내용이 고정되어 있었던 전통적인 德目中心 教育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덕목을 생활화하는 훈련을 윤리·도덕교육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오늘날에도 만만치 않게 주장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윤리·도덕적 상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많은 윤리·도덕적 지식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것을 양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이미 우리사회는 예전에 비해 훨씬 윤리·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한가지 예를 든다면 청소년들에게 행해지는 윤리·도덕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관념적이며 따라서 실제 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윤리·도덕은 실천하는 생활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그 가치 여부를 떠나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범은 몸에 익숙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 갈 수 없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변화가 심하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가 어떻게 급속하게 변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의 최소한의 기본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제국주의 시대의 도덕교육의 역기능 때문에 많은 숙고를 통해서 1960년대 후반에 도덕교육을 강화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마다 德目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그를 교육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첫 단계는 기본적 생활습관 즉 習慣化이고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내면적 자각 촉구 즉 內面化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의식의 촉구 즉 社會化의 단계로 교육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학교에서는 생명존중, 건강, 안전, 예의 범절, 시간존중, 정리정돈, 물건과 돈의 활용을, 중학교에서는 생명존중, 건강, 생활습관, 정리정돈, 시간과 물건 아끼기, 예의 등을 습관화의 덕목으로 삼아 교육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기본덕목의 생활화와 일종의 훈육은 도덕성 발달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sup>17)</sup> 칸트는 교육의 단계를 훈련과 교양화·시민화·덕화의 4단계로 나누었는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을 덕화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그 가장 기초적 단계로서 규율을 강요하여 버릇을 가르치는 단계를 출발점으로 보았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의하면 도덕성은 무규범 → 타율성 → 자율성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성장에 따른 정서적·정신적 특성에 맞게 교육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타율적인 단계에서의 도덕교육을 보면 타율적인 단계에서는 외적 권위에 잘 따르고 모방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좋은 버릇을 들이도록 규율생활을 시키고 모범을 보이거나 훈화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율은 자율의 전 단계이며 준비 단

16) 강재륜(1991), "일본의 수신과와 도덕교육",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대왕사) PP.245-248.

17) 상계서, PP.63-68.

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율적인 교육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길러진 버릇과 행동양식·규범의식 등이 자율적인 단계의 도덕성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율적인 단계의 규범과 규율이 내면화될 때에 자율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율적인 단계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도덕적 상황은 이 시기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 요구되는 모범의 제시, 규율생활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무시되기까지 한다. 한편 이것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절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의 기본예절을 익히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절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회복과 전통적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윤리의 재정립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윤리·도덕교육은 첫 번째로 기본덕목의 생활화를 지향해야 한다.

## 2) 바른 價値觀의 定立과 實踐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란 무엇인가?<sup>18)</sup>

가치란 인간행동의 목표와 수단 및 방법에 대하여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치란 인간행동을 유발시키는 원동력이다. 인간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인간행동의 目標指向性, 價値指向性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치는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내면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18) 김종철(1989). 우리나라의 교육목적과 가치관 교육 「가치관 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PP.81-90.

인간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속에 제도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관이란 여러가지 가치를 그 유형과 중점 및 우선순위등에 따라서 질서있게 정립함으로써 가치관단의 기본방향과 준거를 제시해 주는 일련의 틀이다. 가치관은 개별적인 가치의 선택에 있어서 방향의 제시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가치관은 인간의 情意的 특성으로서 태도보다 심층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것이다. 태도는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지속적이며 정의적인 반응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태도는 가치·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가치관은 태도와 유사하나 그것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심층적이며 보다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치관은 그 역할과 관련하여 인간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19)</sup> 개인적으로 보면 가치관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행동의 동기와 포부, 지각과 해석, 만족과 의의 그리고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확고히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가치관은 한 사회가 유지·운영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규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가치관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치관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정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값있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준거로 교육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지식과 기술의 측면과 함께 두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두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은 누누히 언급되어 왔지만 오늘날 많은 부문의 교육 특히 학교교육은 지식

19) 정범모(1979).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PP.19-22.

과 기술에 관련된 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가치관의 습득을 위한 분야의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이론에서 보거나 실제의 측면에서 보거나 全人教育, 全人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와 이상은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전인교육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가치관 교육을 말하게 되는 것처럼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가치관 교육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人間教育·人間性 尊重教育·德性教育·道義教育등 서로 뉘앙스를 달리하면서도 때로는 혼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 여겨지기도 한다.<sup>20)</sup> 가치관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은 첫째, 과거·현재·미래라는 역사의 전망 속에서 가치관을 조사해 보는 것이고 둘째, 가치관의 폭주와 갈등, 변천 속에서 변하지 않을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사고방식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고 셋째,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이에 관한 사고방식의 변혁을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서 특정 가치관을 절대화하려 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으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바람직한 가치관의 摸索과 實踐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사고방식을 세련되게 하고 정리하는 것이다.<sup>21)</sup>

교육 일반의 문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가치관의 문제는 오늘날 실제로 어떠한가? <sup>22)</sup> 근래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마도 오늘날처럼 가치 갈등이 심한적은 없었다 할 것이다. 개화기나 해방후의 상황도 전환기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그래도 오늘날보다는 가치관의 문제가 덜 심각하였다.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치관의 존재와 그것간의 서열화가 이루어지지 못했

20) 김종철(1989), 전제서, P.86.

21) 정범모(1979), 전제서, PP.25-26.

22) 차경수(1989), "한국사회의 가치상황과 갈등", 『가치관 교육』(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PP.48-63.

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걸모양의 변화와 심층의식의 변화간에 부조화로 인해 갈등이 심해지고 나아가서는 가치전도 현상에 의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 서로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들 가치들이 서로 경쟁적이거나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와 대립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적응은 물론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가치 갈등의 배경과 형태는 어떠한가? 우선 역사적 특수성에서 오는 가치 갈등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갈등,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가치의 갈등, 보수와 진보 또는 혁신의 이데올로기 갈등, 등이 있고 사회사상의 갈등으로서 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 간의 갈등, 균형론과 갈등론의 갈등, 관념론과 유물론의 갈등, 실증주의와 해석학적 이론간의 갈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간의 갈등 등이 있으며 지역간 및 소집단 사이의 가치 갈등으로서 지역간 가치 갈등,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가치의 갈등 등이 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로는 아노미 현상과 문화 정체감의 위기, 문화의 단절과 부적응, 교육에 있어서의 가치 갈등 등이 있다. 특히 교육에 투영된 가치 갈등의 부작용을 보면 주체적인 교육 이념과 국제주의의 갈등, 전인교육과 출세주의 교육의 갈등, 인간교육과 경제 개발을 위한 수단적 교육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것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사회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꾀해야 하며 둘째, 문화적 공동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셋째, 다원성의 인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현대의 산업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떠한가? 23) 산업화의 단계에

23) 하인호(1987), "현대산업사회의 가치관교육, 『국민윤리연구』 제25호, (한국국민윤리학회), PP.61-69.



서 보면 도덕적 가치와 개발적 가치 그리고 학문적 가치가 단계적으로 중시되는 가운데 서로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사회 현상적 면에서 보면 현대 산업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복합적인 구조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에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관 등을 발생시키고 그것들 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 사회가 초래한 가치관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미래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치관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업화에 의해 권태감, 환멸, 반발, 저항 등이 확산되면서 가치관의 침식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건전한 가치관으로의 전환 이동이나 건전한 가치관의 확산이 어렵게 된다. 둘째는 수많은 가치관의 등장으로 제반 가치관들은 선택적 특징을 갖는다. 고도로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선택되는 가치관들은 ① 인간지향적 가치관과 체제지향적 가치관 ② 공민적 미덕과 자기 의존성 ③ 단체 수용성과 개인주의 ④ 사회복지와 개인발전 ⑤ 사회적 책임과 사유 재산권 ⑥ 심리적 미덕과 혁신주의 등의 가치관 무리들이다. 이것들을 슬기롭게 선택하고 또 조정 해야 한다. 즉 산업화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가치관의 조정과 선택이 필수 적이며 이때 가장 중시되어야 할 가치관은 ① 지적미덕 ② 심미적 미덕 ③ 공민적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과학과 인간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따라서 과학의 윤리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학· 기술· 공학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문제와 윤리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특히 의료과학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 교육의 윤리적 영역에 대한 교육학적 대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밖에 많은 가치관의 문제가 이해됨으로서 오늘날 가치관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전통적 가치관의 재 평

가를 통한 재 표준화를 이루고, 후기 산업사회 지향적인 가치관의 설정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적 특징인 욕구, 가족, 도시, 학교의 변화를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미래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세계의식의 개발, 정복과 조화, 미래 세대와의 동일시 의식, 경험에 대한 개방성, 넓고 깊은 휴머니티 등을 들 수 있다.<sup>24)</sup>

### 3) 倫理的 思考 能力의 培養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윤리·도덕교육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면서 실천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 사고 능력의 배양이다. 앞서 언급한 기본 덕목의 생활화 역시 그것은 사고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사고의 토대가 되는 것이며 가치관의 정립과 실천 역시 특정 가치관의 주입이 아니라 윤리적 사고를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선택과 조정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윤리적 사고 능력의 신장이라는 면으로 귀착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윤리적 사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윤리학의 발전 단계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sup>25)</sup>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으로 시작되었다. 자연스럽게 윤리학의 학적 체계가 수립되면서 한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 규범을 비판하고 그것의 근거를 따져 보려 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종교적 윤리를 비판하면서 철학적 도덕체계를 세우는 것을 주된 관심으로 하였다. 그런데 규범 윤리학은 그것이 종교나 정치에 대한 비판자의 구실을 하는 데서는 그 존재 가치를 뚜렷하게 할 수 있었지만, 보편성과 당위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도덕체계를 세우는 일에서는 불

24) 황정규(1989), 전게서, PP71-75.

25) 소홍열(1985), 『윤리와 사고』,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PP.22-50.

완전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분석 윤리학이다. 분석 윤리학은 규범 윤리적 작업에서 문제시되는 도덕 언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된 관심으로 한다. 분석 윤리학은 인간의 언어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의 인식 능력이나 사고방식에 관하여 새로운 철학적 관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언어와 인식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깊이 해 주기는 했지만 규범 윤리학의 정지 작업으로서 큰 뜻을 같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분석적 규범 윤리학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점을 돌려서 도덕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라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윤리학의 새로운 방법론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행위자의 문제로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덕성 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윤리적 이론 체계가 타당한 것인지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런 것을 비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도덕적 행위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비판과 선택의 사고 능력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윤리적 사고 능력이며 윤리학은 그러한 윤리적 사고 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의 모색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자는 덕성보다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그 능력이란 인간의 문제이므로 전지 전능하거나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윤리적 판단을 하는 개인들은 역사적 체험을 하고,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윤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구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요구하는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며 나아가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는 능력이다.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란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윤리

적 사고 능력에 관한 측면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자를 말한다면 그것은 이상적 관망자의 포괄적 지식과 합리적 계약자의 합리적 판단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역사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에 입각하여 보면 포괄성, 합리성, 공감성이 윤리적 사고의 기준이 되며, 더 포괄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공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윤리적 사고의 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 포괄성은 윤리적 판단의 대상 범위를 더 넓게 해 주고 어떤 문제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넓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합리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목적과 수단이 서로 맞는가를 격노하게 하고 일관성있는 논지와 판단의 전개와 설득을 할 수 있게 한다. 공감성은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에 공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함으로써 윤리적 판단이 당위적 힘을 갖게 해준다.

한편 윤리적 사고는 그 자체로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과학적 설명의 구조와는 다른 판단의 구조이다. 그러나 과학적 설명의 구조를 원용하여 그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윤리적 사고의 구조는 판단의 3층 구조로서 인간의 행동, 도덕규범, 도덕원리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윤리적 사고능력은 현행 윤리·도덕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볼 때 지적 기능이다. 윤리적 사고 능력을 지적 기능의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sup>26)</sup> 지적기능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능력으로서 사회현상을 기술, 설명, 분석하는데 필요하다. 이 기능은 바람직한 민주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또 합리적인 가치·태도의 결정과정에서 요청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흔히 지식획득의 기능, 지식 처리의 기능, 탐구혹은

---

26) 정세구(1983), 『국민윤리교육론』, (교육 과학사), PP.82-92.

문제해결 기능으로 이루어지는데 윤리·도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고등 정신 기능으로서 지식처리의 기능과 탐구력은 문제해결 기능이다. 지식처리의 기능은 한 주제에 대한 요점을 밝히고 주요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한 주제 밑에 정보를 분류하고, 사건, 사실, 아이디어를 규칙에 맞게 정돈하고 그리고 요약하는 등의 지식을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고 어떤 정보의 출처가 더 믿을 만 한가를 결정하고 선전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거로부터 추리를 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탐구력은 문제해결의 기능은 존재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정의,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탐색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등의 능력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도덕적 사고능력, 인과 사고능력, 사회 중심적 사고, 상상적 사고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윤리적 사고 능력은 미래사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 불능의 여러 상황이 급격히 나타나며 다원적인 여러 가치들이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모든 경우에 각각의 경우마다 모범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모두 제시하고 교육 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민주사회에서도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다.

## IV. 21世紀를 對備한 倫理·道德教育의 內容

### 1. 바람직한 價値·德目

21세기를 대비하는 윤리·도덕교육의 전체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로 바람직한 가치·덕목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 이병진은 교육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sup>27)</sup> 그는 교육자를 인간으로서, 애국적 사회인으로서, 도덕성 교육을 담당하는 리더로서, 세계인을 양성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자로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와 덕목을 갖도록 할 것인가를 말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인간으로서 교육자는 학습자들에게 사랑과 신뢰, 정의로움, 성취력을 둘째 애국적 사회인으로서 교육자는 학습자들에게 고유의 선비정신, 忠·孝·信義, 투철한 國家觀과 통일의식을, 셋째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리더로서 교육자는 학습자들에게 직면할 모든 문제와 사태에 대한 융통성과 적응성, 주체성, 미래에 대한 이상과 꿈을, 넷째 세계인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학습자들에게 통합적 안목, 협동과 봉사, 창조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다섯가지 가치 및 덕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孝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생활은 윤

---

27) 이병진(1994),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 『우리사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국민윤리학회, PP.93-105.

택해졌으나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며, 생활력이 없는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등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孝의 부재현상의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사전적 의미로 孝란 (부모를 섬기는 도리),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율곡 선생은 [百行之道]라 하여 [인간의 도리 중에 으뜸]이라 하였고, 이 퇴계 선생은 [百行之源]이라 하여 [모든 행동의 길잡이]라 하였다. 말 그대로 孝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하는 [효의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孝(家庭) → 禮(社會) → 忠(國家)

부모에 대한 정성 : 萬人과의 조화 및 질서 : 君에 대한 충성

도표에서와 같이 孝는 禮와 忠의 基礎가 됨을 알수있다. 가정으로부터 싹트는 孝는 社會에서 조화 및 질서의 기준이 되는 禮의 기초가 되며 國家에서 요구하는 忠의 바탕이 된다. 孝는 사회와 국가의 精神德目이 되는 禮와 忠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별개의 精神德目이 아니라 연관된 하나의 精神德目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모든것의 기초가 되는 孝를 行하는 方法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옛 성현들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위해 제시한 孝의 방법 몇가지를 소개하면 모세는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하였으며,<sup>28)</sup> 사도바울 역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다.<sup>29)</sup> 또한 석가모니도 經典을 통해 [부모님이 꾸짖더라도 마음을 언짢아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하고 아버이를 봉양할 때는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하며 오로지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였다.<sup>30)</sup> 또한 공자의 제자 중에 효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고 孝經의 저자로 알려진 曾子(BC 506 - BC 436)는 [孝有三,大孝尊親,其次弗辱,其下能養] (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바, 가장 큰 효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라 하여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을 효의 으뜸으로 삼았다.<sup>31)</sup>

孝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바, 孝의 源泉은 家庭이며 가정에서 부터 출발하게 됨을알 수 있듯이 가정의 교육 특히 윤리·도덕교육의 중요성을 또 다시 깨닫게 한다. 가정은 효를 잉태하는 곳이며, 인류의 기본적 질서가 형성되는 곳이다. [세살버릇여든간다], [한사람의 뛰어난 어머니는 백사람의 스승보다도 낫다]는 속담이나, [어린이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 (나폴레옹), [어린이는 비평보다 본보기가 필요하다] (쥬베르)는, 말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임금, 스승, 부모가 백성과 제자,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마음은 같다는 뜻도 있지만, 임금, 스승, 부모의 역

28)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29)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 4절

30) 김중두 (1995), "효를 바탕으로 한 將兵 人性教育," 국군홍보관리소, P.130.

31) 상계서, 131.



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를 평가하기를 [총체적인 윤리의 위기시대]라고 한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을 보았다. 교수의 殺父사건을 비롯, 한약상 부모살해살건, 76세된 노인 아들이 메마른 자손들의 불효를 한탄하면서 92세된 노모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면, 비정의 아버지가 3자녀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 외에도 지존파 사건, 온보현 사건, 휴거사건, 영생교 사건등 가정과 사회, 종교단체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국민의 윤리를 선도해야 할 君(정치인), 師(교육인), 父(가정)의 숭선수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孔子가 말한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는 기뻐하고 먼 곳에서 오게 하는 政治術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民生보다는 당리당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교육자들 역시 어떤 뜻으로 참 教育化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교단에서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머리에 구호띠를 두르고 경찰에 대응하여 폭력행사를 마다하지 않으며 정치인들과 합세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결코 좋은 스승像으로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의 모습에서도 대가족제도가 아닌 핵 가족화된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외면하고 拜金思想에 의한 직업선호관에 따라 진정한 가정의 역할과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人性教育 환경이 열악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모범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교사들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正直과 誠實이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덕목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正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尊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德目에 대해서는 별로 異議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지도 않는 것 같다. 누구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享樂의 추구가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삶 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風潮가 점점 蔓延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나 어떤 직업의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임에는 틀림없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누구이든 먼저 명예의 큰 損傷을 받게 되고 信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정직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직이라는 말은 비교적 단순하게 定義될 수가 있다. 말과 사실 또는 말과 행동이 합치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직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기도 비교적 쉬운 덕목이고 그런 의미에서 道德教育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내려질 무거운 벌을 각오하고서 혹은 자기에게 닥쳐올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직은 때로는 예민한 도덕적인 良心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勇氣를 전제하고서만 지킬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表出된 말과 행동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말하자면 정직이라고 하면 객관화된 말과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양심을 전제로 하기는 해도 표출된 따라서, 객관화된 말과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직은 비교적 단순하고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社會構造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복잡한 사회 안에서의 인간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서로 깊이 얽히면서 정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되었는지 모른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더 긴밀해졌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옛날의 조용하고 단순한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보다도 더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직은 인간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상호 협력을 쉽게 만들고 사회적인 紐帶를 강화하는 데 불가결한 덕목이다. 정직한 국민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직이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하므로써 집단적인 단결력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성실한 사람은 그의 심층적 충동과 모든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자아를 支配하고 자기의 도덕적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스스로의 윤리적인 실체를 이룩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실한 사람은 진실된 사람처럼 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문제 삼고 자기 자신을 省察한다. 성실한 사람은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표상을 늘 개선하고 그 정체를 늘 재창조한다. 그는 자아에 관한 늘 새로운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은 늘 스스로의 정체를 이룩해 가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다. 성실한 사람의 자아의 정체는 노력을 통해서 창출한 產物도 아니고 때묻지 아니한 자연도 아니다. 그것은 끝없는 길이고 과정이다. 먼 곳에 있는 至高의 善을 향해서 쉼새없이 발전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직은 인간의 말과 사실의 합치 그리고, 말과 행동의 합치를 말한다. 따라서 말과 사실과 행동 등 객관화된 사실들을 통해서 가름된다. 그리고 정직은 사회적인 共同生活을 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덕목이다. 정직한 인간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의존할 수 있고 따라서 서로 협력할 수가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역할 분담이나 경제적인 분업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사회적인 공동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들에게는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인격적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객관적인 말과 행동을 통한 표현과 주관적인 자아의 정체의 합치를 말한다. 따라서 진실된 사람에게는 대세에 단순히 순응한다든지 자기를 속이는 변명과 같은 것이 용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진실된 사람은 표현과 주체 그리고, 객관과 주관의 분리가 되기 이전의 原始的인 합치의 세계에서 생활한다. 자아의 정체를 속이는 삶의 표현이 있을 수 없고 삶의 표현을 통해서 자아의 정체를 창조하는 그런 주관과 객관의 합치의 세계를 말한다. 성실은 말과 행동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원천으로서의 마음의 세계 곧, 자아를 문제 삼는다. 여기서는 객관적인 표현을 창조하는 주관적인 주체의 省察이 과제이다. 성실한 사람은 늘 자아를 省察하고 자아의 계발을 위해서 생활한다. 따라서 성실은 모든 自我發展과 인간의 역사에서의 모든 참다운 가치 있는 발전의 原動力이다. 성실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삶의 표현과 자아의 정체의 합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합치의 초점은 역시 자아의 정체에 대한 성찰과 그 끊임 없는 계발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죽어 가는 허약한 환자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나 진실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성실의 사람이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어디서나 정직과 진실과 성실이 지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떤 의의 있는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정치.경제.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만약 정직과 진실과 성실이 밀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沒落과 破滅과 災殃이 다가온다. 32)

32) 이규호(1989), "現代人을 위한 10가지 德性論", 서울:문우사, PP.82-85

셋째는 信義와 信賴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不信風潮에 의해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흔히 不信社會라고 들 말한다. 그런데 信義와 信賴는 인간의 공동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서로 전연 믿지 못하면 인간의 공동 생활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신의는 문화적인 전통의 차이나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를 초월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信義도 성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윤리적인 자아의 형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의의를 가진 덕목이다. 그래서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결함이 있거나 또는 어딘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상대할 수 없는 또는 붙들 수있는 인격적인 실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가 없다는 것은 자아의 實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신의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태도 곧, 대인관계에서 요청되는 덕목이다. 물론 어떤 사회적인 기관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그 기관을 擬人化해서 하는 말이다. 어떤 물체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자유로운 인격과 자유로운 인격 사이에서만 신의라는 덕목이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신의의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標本은 친구와 친구의 사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청되는 인간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의 경우나 強壓에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에 대해서는 신뢰라는 말이 적당하지 못하다. 자유로운 인격 곧,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인격만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에는 처음부터 冒險的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다. 열 자 깊이의 물 속은 들여다보지만 한 자 깊이의 가슴 속은 들여다 볼 수가 없다는 말처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

는 늘 皮相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신뢰는 늘 일종의 모험이다.

신뢰는 인간의 공동 생활을 위해서 불가결한 기반이다. 전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은 우리의 공동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想像 이상으로 破壞的인 역할을 한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얻는 이 힘은 사실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難關을 克服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뒤돌아 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반대로 불신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힘을 빼앗긴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가 그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구김살 없이 자기의 인간성을 啓發할 수가 있다고 한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조성하는 분위기 속에서만 마치 봄의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초목이 자라나듯이 아동들의 곧은 인격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不信風潮는 겨울의 눈바람이 초목을 위축시키듯이 인간성의 성장을 위축시킨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을 신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대상 곧, 자유로운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에는 처음부터 모험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신뢰는 強要할 수가 없다. 普遍的인 지식이나 기계적인 기술을 배우듯이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머리만으로 깊이 생각하고 세밀히 분석하면 할수록 더 의심이 많아진다. 불신이 만약 두뇌의 産物이라면 신뢰는 靈魂의 작용이 라는 말이 있다. 어쨌든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인격의 더 깊은 곳으로부터 발해지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밝게 만들고 따스하게 만든다. 그래서 신뢰의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한 일을 추구할 수 있

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신뢰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不可缺의 전제라는 것이다.

신뢰는 강요될 수도 없고 쉽게 배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신뢰하려고 애써도 의심이 더욱 짙어 가는 일이 많다.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그의 인격의 핵심으로부터의 모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의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그런 생각에 근거한 생활 태도가 아니면 그런 모험적인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開放的이고 積極的인 그런 생활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 태도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느냐 혹은 閉鎖的이고 消極的일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생활 환경과 그 역사적인 전통에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다른 덕목들도 그렇지만 특히 신뢰의 분위기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인간이 그의 세상에 외톨박이로 외롭게 내던져져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는 남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불신의 풍조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 마음을 열 수 있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밝고 따스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물론 어떤 도덕적인 가치도 우리의 인격적인 決斷과 인간적인 修鍊을 통하지 않고 환경이 대가없이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인격적인 결단과 사회적인 환경이 함께 작용해서 성취되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들이 많은데 신뢰는 바로 그런 덕목들 중의 하나이다.<sup>33)</sup>

넷째는 寬容과 사랑(愛)이다.

寬容(tolerance)은 일반적으로 관대하고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덕목을 말하는데 1995년은 유엔이 정한 관용의 해이므로, 세계화를 지향하

33) 이규호, 전계서, PP.95-98.

는 관용의 덕목으로 일류화.합리화.일체화.한국화.인류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류화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세계인류, 세계최고가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 전략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지름길이다.

둘째, 합리화는 산업화되고 근대화된 우리사회가 상당수준으로 합리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합리적인 요인이 우리 사회 도처에 산재해 있다. 과거의 그릇된 인습과 태도는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화는 일체화이다.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국민 모두는 계층과 지역, 분야 그리고 세대의 벽을 넘어서 갈등과 분열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뛰어야 한다.

넷째, 세계화는 한국화이다. 세계화라 해서 무조건 우리 것을 버리고 선진국 것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가치와 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며 세계의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자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다섯째, 세계화는 인류화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우리나라와 민족만의 이익을 쫓는 小我 적인 것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공영과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大乘的인 것이다. 핵,인권,환경,질병 등 세계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관용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사랑(愛, love)은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 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아껴주고 한없이 이해해 주며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에 관계없이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21世紀에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국제시대가 도래한다면 모든 나라에게 이것이 공평하게 적용되어 아프리카나 남미등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져 가는 이웃이 발생치 않도록 나누어주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이같은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教育內容의 體系

### 1) 人間性 教育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다. 그것도 사람다운 사람,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다. 교육학 대사전에 인간성이란 “모든 인류에서 공통되는 보편적 본질, 또는 인간의 본래적인 또는 인간의 본래적인 성질, 경향 및 능력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성 교육이란 인간의 본래적인 성질, 경향 및 능력을 바람직하게 키워주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하는 일련의 교육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장에서도 살펴 보았거니와 현 시대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반인류, 반도덕, 반윤리적인 범죄가 하루도 그치지 않는 사회현상에 질린지 오래고,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철저히 물들어 버린지도 너무 오래 되었다.

이와같은 반인류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될때 느끼는 것은 인간성 회복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성 교육이 지향해야할 두가지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어느정도 역할을 했지만, 사람됨을 일깨워 주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겠다.

인간성 교육은 우선 人間性 恢復의 교육에서 출발 되어야 한다.

인구의 증가로 인간존엄성이 상실되어 인간의 생명이 인간이 만든 물질에 노예화 현상의 조짐이 보이므로 이대로 계속 된다면 생명을 존귀히 하기위한 인류문명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으로 그위협에 목숨을 잃게되는 사

건들이 어미 발생되고 있음—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성 회복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격을 함양하여 도덕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서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인간성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일진대, 지금까지 교육자들은 인간성교육 보다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한 고교 교육, 고입을 목표로 한 중학교육, 그리고 자녀의 바른 성장보다는 공부를 우선으로만 생각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치우쳐서 인간성 교육을 소홀히 해왔음을 반성하면서 교육자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교육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회제도이므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념이 먼저 정립 되어야하고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원래 교육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교육이지만 오늘날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고 또 절박하게 느껴진다.

인간성 회복을 말을 바꾸면 인간의 특성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를 위한 전제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본다.<sup>34)</sup> 전제가 되는것은 첫째, 의미있는 삶,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가치 추구를 통하여 인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명 존중이 포함된다. 둘째, 가치판단 능력 함양과 가치 기준의 명료화 이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지혜와 윤리를 함양하는 것이다. 넷째로 통합된 가치관을 형성토록 한다. 이를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관능의 쾌락을 추

34) 김갑철(1991), "도덕성 회복과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 pp.14-20.

구하기 보다는 차원높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서 현실적인 육체적인 쾌락에의 유혹을 이겨내고 원대한 꿈을 각계되며 어려움을 참아내게 될 것이다. 둘째, 이기주의적 생활태도를 추방토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서 모든 사람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번영이 초래되고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의 행복이 실천되도록 원대한 안목과 대국적 견지에서 사리를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된다. 셋째, 협동정신을 함양토록 한다. 협동과 단결은 어떤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특히 경제적 자유 경쟁이 치열하게될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인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땀의 고귀함을 인식토록 해주어야 한다. 바로 근면과 노력의 덕목이다. 그래야만 많은 욕구들을 제대로 성취해 나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합리적 사고의 함양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특성인 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인간답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인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인간성 교육의 다음 내용은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날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정규 도덕교육 차원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그것은 환경 교육과 문화교육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環境教育<sup>35)</sup>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문제와 불가론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앞서 예시한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중 “다스리라”는 말은 창조 질서의 세가지 즉 첫째 하나님과 피조물(인간)과의 관계, 둘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셋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중 마지막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특히 강조한 사항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

35) 환경교육을 본 논고에서는 환경 윤리교육으로 지칭한다.

포하고 있다. 마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임무를 주었다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라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하고 또 선용하는 대상이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해서 자연을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또한 임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자연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노릇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정원,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요즘 우리들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처해 있다. 또한 생태학적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구약의 창조신앙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계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결코 파괴해서는 안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책임성있는 자연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sup>36)</sup>

이와같이 자연과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공존관계를 확립 하는것이 환경윤리를 이루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윤리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 보여주듯이 보편적인 것으로 우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환경보전을 위한 범세계적 합의체인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설립이나 각국의 환경보호는 구호만으로서 끝나서는 지구의 종말을 자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지구를 지키는 일을 이제는 모든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터전을 보호 유지 관리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상이

36) 박준서 (1984), "하나님 '인간' 자연 그 상호관계", 『구약개론』 기독교 방송, pp.59-64.

변의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원래자리로 돌아가서 인간은 자연을 관리 유지하고 자연은 인간을 보호해주는 본래적 삶의 모습으로 지금 부터라도 실천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명의 의미를 찾고 자연을 보전하며 윤리적 행위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유기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아야만 생명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은 생명을 갖고 함께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사는 훈련을 통해서, 자연과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命을 받는다. 이것은 生이라는 직설법을 전제로 하는 명령법이다.<sup>37)</sup> 그럴 때 자연도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과의 관계를 갖고, 우주와의 유기체적인 개념에서 통제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 '연대 공동체'임을 깨달아, 자연과도 화평해야 하고, 검약과 절제로서 살며, 지배보다는 섬김을, 증오보다는 사랑을, 대항보다는 협동과 공동참여를 할 수 있게, 갈등을 극복하는 포용력과 긍정적·적극적 사고로 자유로운 공존, 정의로운 협동, 평화로운 공동참여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sup>38)</sup>

나머지 하나는 文化教育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로 상품만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세계화'를 통하여 수출하고 수입되고 있다. 문화가 가진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할수 있다.<sup>39)</sup>

37) 맹용길 (1992), 『자연·생명·윤리』, 임마누엘, PP.56-57.

38) 박용경 (1993), "환경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동아시아연구소, P.215.

39) 김형철 (1995), "문화 위기와 도덕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P.25.

첫째, 문화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 체계적 총합을 의미한다. 인간은 인간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 인간이 인간다운 문화를 향유하지 못할때 동물과 다름없는 삶이 될 것이다.

둘째, 문화는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총체적 집합체이다. 저급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대체로 그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저급 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대체로 좋은 문화이다.

그러나 문제는 저급 문화는 인간의 말초적 본능을 유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생력을 갖고 있으나, 고급 문화는 인간의 고양된 능력을 개발하고, 또 그것에 기초한 욕구를 만족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사회에는 대중과 엘리트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과 갈등적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근본 문제는 협조적 관계를 이루면서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문화의 기능은 문화는 인간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지배하면서, 우리 삶의 질과 의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 생활의 기본인 협동을 가능케 해주는 가치 체계의 총합을 의미 한다고 할수 있다.

문화의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는 이유는 첫째, 문화의 이동이 격심해지는 것 자체에서부터 발생한다. 문화는 고급이든 저급이든 인간의 가치 체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주 이동되고 변동되는 데서 오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문화의 이동은 저급한 문화에서 더욱 자유스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일반 대중이 수입된 문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구 밀려 오는 문화를 마구 섭취하

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문화는 대량 매체의 위력에 편승해서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문화 이동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있는 것이다. 고급 문화의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급 문화만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생해서 자료를 파괴해 버리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번져 나간다면 우리는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안정적 문화 생활을 향유하는 데서 상당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천재 지변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동 속에서 한편으로는 생산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산 활동이 주로 비창조적이고 생존 위주적인 곳에만 집중된다는 것을 볼 때도 왕성한 문화 활동은 안전된 여건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정체된 상황에서 아무런 자극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또한 그 나름대로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과 그 폭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문화의 위기는 물질적 문명이 엄청나게 비대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정신 문화의 불균형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대중은 말초 신경을 자극해주는 물질적인 것에 전적으로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개인이익이 조금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박 관념을 가지면서, 자신을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을 훼손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 문화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될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외래 문화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수출만 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좋은 문화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문화의 위기를 내세우면서 문화를 고정적

으로 정체시키는 것은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실 우리는 피동적으로 문화 수입에 거부하는 몸짓만을 보임으로써 고립과 후퇴를 자초하는 사회를 많이 목격해 왔다. 우리 나라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은 외부와의 부단한 교류를 가진 것의 결과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수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엄밀히 따져 보건대 오늘날 그 현상이 다소 격렬해지고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문화의 교류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에 대하여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후퇴하는 사회에서나 있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 벅찰 정도로 밀려 오는 문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고유한 문화가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어 내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향유하는 가치 체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잘 들어맞는 문화 체계는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한다. 서양 문화가 모두 물질적 문화인 것도 아니고, 동양 문화가 모두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문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시대에 살면서 문화 교류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문화는 인류 역사상 늘 경쟁적 관계와 상보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 내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원주의적 문화 공간에서 우리는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를 배양해야 된다. 위기로 보이는 것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문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그것이 경쟁력이 없어서인지 시대에 뒤떨어져서인지 관찰한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보편적 차원에서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마다 엄청난 산림이 날아가면서 묘지가 늘어가고, 급기야 그것이 흉칙한 형태로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하는 장례 문화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개인의 가치와 뿌리깊게 연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반했을 때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뿌리깊은 가치관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전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게 된다.

장례문화도 부모에 대한 효라는 기본 가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부모의 시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인지될 수 있다. 아마 우리의 장례 문화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반자연적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지내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 와서는 환경에 훼손을 가하는 반자연적인 형태로 어쩔 수 없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문화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도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 2) 民主市民 教育



한 국가가 존속 발전하여 나가려면 교육은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가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국가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교육은 그 국가의 문화전통이나 지배적인 윤리관과 규범 그리고 국가이념과 정치목표 등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정치이념이나 정치목표가 다르면 인간교육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sup>40)</sup>

국가마다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인의 자유스러운 자아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동의하도록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간교육에 기반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행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특정공동체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국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을 알고 변화해 가는 사회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역량을 획득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을 사회전체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개별적인 현상을 전체와 연관하여 생각하며 어떤 갈등이나 대립도 정치적·경제적·역사적·심리학적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시민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은?

독일은 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정치사회화하여 민주기반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전국민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강조점은 첫째, 독일국민에게 민주주의식을 확고하게 하고,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독일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며, 셋째, 정치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의 국가와 사회질서의 원칙

---

40) 김택환(1987), "국민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P.3.

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① 自由民主主義, ② 國民主權과 權力分立, ③ 基本權과 法治國家性, ④ 政黨들의 협력하에 政治意思形成과 決定過程, 그리고 ⑤ 社會的 市場經濟體制의 基本原則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sup>41)</sup>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제도개혁과 더불어 의식적 개혁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각 사회집단, 정당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사고나 무사안일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적극적참여 등을 가진 민주적 의식과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sup>42)</sup>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3)</sup>

첫째, 독일과 영·미선진국에서 보듯이 우리의 민주시민 교육도 민주적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되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조직구조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행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民, 官, 政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에 의한 교육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어 다원적 사회에 부합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라전체의 방향을 볼 수 없으며, 위기시 조정가능한 메카니즘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라는 배가 도데체 어디로, 어느속도로 가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부주도에 의한 교육은 정부의 행정조직과 제원이 충분함을 고려할 때 그목표에 대한 효율성

41) 김택환(1987), 상계서, P.4.

42) 전득주(1994),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정치학회, P.13.

43) 전득주(1994), 상계서, PP.14-16.

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될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주의나 정권담당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때문에 이 상이한 두 유형을 종합한 새로운 유형이란 民, 官, 政이 공통주체가 되는 방법일 것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이 정부의 개입없이 초당파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야합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정부에 의해서 출현되는 재정지원으로 본 교육이 운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전담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을 개발하고 교재와 교수요목개발, 교육담당자의 훈련과 특히 가정, 학교, 사회 각 분야 및 대중매체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위한 사전연구와 계획은 통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은 분단된 나라의 공통귀속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장차 분단된 국가에 대한 학문적 대화를 촉진 시킴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이룰 경우 그 차이점들을 접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4)</sup>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으로 자유·평등·정의·애국심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질서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절제, 공공질서, 청결과 환경보호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시민 사회의 기본덕목이다. 셋째, 자유사회에서의 절차 문제이다. 자유

44) 한국교육개발원(1994), "21세기에 요구되는 한국시민의 자질", 『민주시민교육』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167 - 176.

사회에서는 이견과 갈등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 합의에 이르는 집단 과정과 절차, 그 절차에 참여하고 약속과 합의를 준수하는 원칙 등이 요구된다.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자유사회에서 절차에 참여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언어의 사용, 사실의 확인, 가치판단, 진실의 문제가 합리적 의사 결정의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밖에 민주시민 교육의 한국적 특성으로서 중요한 점은 건전한 민족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공동체 정신을 길러가는 것이다.

民族이란 역사적으로 공통성과 결속력에의해 구성된 집단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민족이 공동체로서 존속하려면 공통성만으로는 충분한 조건이 될수 없을 것이다. 민족 구성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상호 교통 속에서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토우가 말한바와 같이 “민족은 타고난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학습과 습성형성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 공동체의 재형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분야보다 비정치 분야의 사회·문화·경제 공동체 형성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헌팅톤(S. Huntington)의 문명 충돌론에 따르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져 단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세력이 강하게 부각되어 세계화를 밀어뜨리고 있다.

민족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개방화나 세계화는 멀어진다. 같은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만큼 호소력 있는 것도 드물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가들이 문제가 생기면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민족주의는 근대화에도 적용되어 왔다. 자기 민족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 민족 국가 건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작업은 19세기 말 이래의 구민족주의의 과제

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적 추세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 하나에만 매달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민족주의를 해도 이제는 지구적 민족주의를 해야한다 지구적 민족주의란 EU처럼 개별 국가 — 지역 통합체 — 세계질서 — 지방 자치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나라 주변의 아시아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개별 민족주의보다 지구적 민족주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APEC 구상이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를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문화적 쇄국주의의 피해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의 정신적 고유성은 굳게 지키되 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통상, 투자, 인적 교류에서 국경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한다. 외국 대학의 분교 설치,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대학생들의 외국 대학 학점 이수, 유년기부터의 영어교육, 외국인 취업확대, 위성TV등 국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확대, 초국경 투자, 홍콩식 국제 도시의 건설 등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이를 놓고 문화적 식민화나 외래 사조의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계화에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못된 나라나 못난 나라일수록 국경 안팎으로의 이동 절차가 까다롭고 요식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統一을 對備하는 教育<sup>45)</sup>

21世紀의 세계화를 지향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통일문제이다. 통일은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교육등 모든 분야와 연관되는 민족 숙원의 대과제이므로 21世紀 윤리, 도덕 교육방향의 마지막 방안으로 통일시민교육을 제시하고자한다. 통일은 단순한 '영토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에 있다. 민족통일이란 이제 까지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체제하에서 상호 적대적

45) 이 부분은 김영수(1994),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의 발표논문 PP.195-201에 크게 의존했음.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갑자기 또는 서서히 뒤섞이는 과정 즉,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됨을 의미한다.

민족통일은 두 개의 다른 정치문화 속에서 살면서 분단되어 있던 민족을 하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가진 정치적인 민족으로 재구성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정치적 민족으로의 재구성이란 근대적 의미의 민족의식을 정착시키는 작업으로 "보다 큰 전체", 즉 "우리(WE)"에 대한 "나(I)"의 의식적인 긍정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정치적 소속감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게 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의식적인 구성원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며, 시민인 것이다.<sup>46)</sup>

#### (1) 統一教育의 전개

통일교육은 새로운 민족형성을 위한 '정치교육'이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 그 방향에 맞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이를 가르칠 교육자의 신념과 확신이 뒷받침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통일교육은 "과연 어떤 통일이 좋으며, 어떻게 이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치권의 의견이 제각기 다르고, 재야와 정부의 입장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그 방향을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 또 일부 교육자의 통일교육이 정부 당국에 의해 이른바 '의식화'교육으로 평가

46) 권세기(199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P.89.

되어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sup>47)</sup>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음에 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며, 통일이란 무엇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인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이며 또한 통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가능한가? 통일을 추진할만한 준비태세는 갖추어져 있는가?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어떤 순서를 따라 통일 노력을 펴나가는 것이 현명한가?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정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일 개념의 새인식과 통일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 (2) 統一 概念의 새 認識

통일교육의 방향정립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작업이다. 분단 직후 통일은 곧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했으며, 통일의 당위는 분단 고통의 해소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사회로 굳어져 버린 현 상태에서는 단순한 국가통합이 통일이 아니라, 한민족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민족사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통일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정립시켜야 한다.

한민족의 통일은 또한 민족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은 민족사회 성원 개개인에게 가족분단의 고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를 경계하는 군비의 유

47) 양호민 외(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pp.349-351.



지, 외교적 소모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 등은 민족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북한 사회 모두에게 안겨 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통일은 한민족이 굴종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고른 복지를 누리며, 동등한 정치참여기회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sup>48)</sup>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는 통일에 선행하는 것이며, 통일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공리적 가치이다.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남과 북이 이념적 타협을 통해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일문제에 있어서 지도이념에 관한 한 현재의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주체사상체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통일환경이 급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 한국의 통일정책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의 당위는 '남반부 인민의 해방'에 있다. 북한은 1945년에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지만 남한은 일본의 지배를 승계한 미국에 의해 다시 강점 당했다는 시각에서 '못다 이룬 남반부 인민의 해방'을 통일로보고 있다. 통일의 주체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인민계급에 속하지 않는 많은 수의 남한 민족사회 성원을 배제시키고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한민족 전체의 화합을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에 통일목표를 두고 있다. 즉 민족사회의 단일화를 이루어 민족 내부에서의 대립투쟁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민족사회 발전에 참여하게 하며, 또한 발전의 성과를 모든 구성원이 균점하도록 하는 데에 통일의 목표를 두고 있다.<sup>49)</sup> 이에 따라 통일의 당위는 '

48) 이상우(1993), 『함께 사는 통일』 나남, PP.354-355.

49) 권세기, 전게서, PP.96-97.

남북한 주민의 조국근대화 과업에의 동참'에서 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통일 당위론은 19세기 후반 이래의 민족적 과업인 '독립되고 통일된 근대적 민족국가건설'이라는 거시적인 안목, 즉 분단극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민족사의 전개차원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은 '자유 민주 복지가 보장되는 발전된 민족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중간에 거쳐가야 할 하나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인지시켜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이 균형된 발전의 바탕을 확립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통일이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라고 해서 어떤 통일이든지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통일은 한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사회를 가장 바람직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이 민족의 희생을 되도록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세계사적인 흐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능성에서나 그 합목적성에서 장기공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 통일을 이루는 미래까지 거쳐 갈 수 있는 길들을 상정한 후, 각각의 가능성과 그 합목적성을 검토해 본다면, ① 북한의 국가체제가 소멸하고 한국의 주권이 북한영역으로 확대되는 통일, ② 그 반대의 통일, ③ 서로 타협하여 새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통일, ④ 정치통일을 유보한 채 두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장기공존 관계의 지속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길은 이른바 '흡수통일'이다.<sup>50)</sup> 더 정확히는 북한체제 해체에 의한 한국 통치 체제의 확장에 의한 통일이다. 북한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 북한의 현체제가 붕괴되고 친한국체제가 등장하여 한국체제에 흡수통합되어 갈 경우, 또는 북한의 내분에 한국이 개입하여 북한체제를 한국체제에 편입시키는 경우, 그리고 극단으로는 북한을 무력 해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어느 경우도 한국의 통치범위가 북한영역으로 확대되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형식에서는 마찬가지다.

두번째 길은 북한에 의한 '남반부 해방'이다. 즉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우선 남반부에서의 인민민주혁명을 통한 친북한정권 등장으로 북한이 비군사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북한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반부를 무력해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번째 길은 보통 '예멘식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협의를 통하여 하나의 헌법을 채택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북한의 현체제가 변혁을 거쳐 다원주의 민주체제로 되거나 한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북한체제와 상응하는 체제를 가진 나라로 바뀌게 되면 가능한 길이다.

네번째 길은 '진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공존을 지속해 가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가면서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기능적인 통합을 해 나가면서 오랜시간동안 각각 체제의 진화를 겪어 서로 무리 없는 정치통합이 가능해질 때 통일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모형이나, 단기적으로 보면 공존모형, 즉 분단지속 모형이 되는 셈이다.

### (3) 統一教育 方法

50) 구영록(1993), "한국의 국가이익과 통일정책," 나남, PP.39-42.

이상의 여러 가지 통일에 이르는 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를 자신 있게 예단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무나 불확실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통일이 민족 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일인지는 가려낼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기는 통일'이 아닌 '함께 사는 통일'을 통일의 길로 삼는다면, 통일이란 정치통합까지 포함한 완전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날까지의 과정을 통일의 목표에 맞도록 관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창조작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은 누가 이루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민족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분단은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통일은 한민족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한민족 모두가 동의하는 자주통일의 원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선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통일의 원칙은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는 새 시대에 와서는 움직일 수 없는 통일원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 고른 복지, 균등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은 추구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통일된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는 통일된 사회가 아니며,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폄박하는 사회도 통일된 사회가 아님을 인식시켜, 민족사회 성원 모두의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할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 (4) 統一環境의 變化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이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정치사정이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고 남북한의 체제적 타성 때문에 통일이 단시간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것이라는 데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남북화해와 통일의 전망은 대부분의 관련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sup>51)</sup> 따라서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 못지 않게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교육시켜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한국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통일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의 통일성취능력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제환경이다.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환경이 조성되면 아무리 남북한이 통일을 원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냉전의 종식, 남북한간의 국력 변

51)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등 국내외 국제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향후 15년 이내에,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혹은 남북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일보』, 1995년 2월 9일자 참조.

화, 그리고 통일 인식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통일추진능력 향상 등의 중요한 통일환경 변화로 이제 통일은 가능의 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냉전시각에 집착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한정되지 말고 이러한 상황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분단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 통일을 막아오던 최대의 국제적 제약을 풀어주었다. 무엇보다 먼저 소련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 종식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한국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즉,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민족에게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남북한 관계가 국제적 냉전구조에 연계되어 있는 동안 통일문제는 냉전 주도국의 냉전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분단극복 노력을 주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냉전 종결로 인하여 이러한 제약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강대국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오직 국익차원에서 남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냉전 후유증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동맹국이던 소련(현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두 강대국의 동의를 얻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도 성공했다. 이제 한국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책임과 주도로 다룰 수 있는 '한국문제의 한국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것은 한국 주도의 통일노력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 준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통일의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민족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통일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 이념을 국민적 기본 규범으로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유민주

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체계적으로 실증해야 북한 주민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체제에서도 한국은 점차 경제에서 공공영역을 넓혀 북한체제와의 상응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정신에 기반한 과감한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은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또한 문화적 정통성 유지가 통일의 근본적인 기초 확립 작업을 깨달아 문화통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즉, 통일을 위해서는 바로 위에서 제시한 자유민주 체제의 확립, 복지사회 건설, 그리고 문화 정통성의 확립 등이 반드시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통일은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정립에는 반드시 통일환경의 동태적 변화가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5) 統一教育 課題

앞에서 논의한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내용은 주로 영토통일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어서 제대로 합의만 도출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남북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과 부딪치게 되리라 생각된다.

그 첫번째가 정치·경제의 통합이 될 것이다. 극적인 환희를 동반한 극적인 환희를 동반한 영토통일 이후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난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계층 및 지역갈등으로 사회갈등 구조의 중층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남북한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 심리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북한 내의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와

남한 내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쇠퇴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며, 북한 지역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하함에 따라 실업률의 급증, 노동임금 저하 및 노동시장 교란 물가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나 남한 주민들의 실질생활 수준저하 및 사회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이와같이 영토통일로 인한 형식적인 통일한국의 성취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난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최대 과제는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의 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통합할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일은 남북한 주민들 간 누적되어 왔던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 작업일 것이다. 영토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 적대감은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리라 생각된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현실생활에서 상당수준 순조롭게 충족된다면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이질성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상호 적대감 해소는 남북한 주민들 쌍방의 문제이나, 남한 주도의 통일일 경우 그 심화 또는 해소의 주도권은 남한 주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쌍방의 적대의식은 우선적으로 남한 주민들이 영토통일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남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과중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대량 남하로 남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경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차별의식 및 차별대우가 심화될 경우 상호 적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2) 한백연구실(1993), "통일한국의 당면과제 예측:사회문화분야 델파이조사," 『포럼 21』, 제8집, P.18.



따라서 영토통일 이후단계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상호 적대감이 해소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실시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고용창출 및 생계지원 대책 등이 적기에 실행되면 북한 주민들의 대량남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생계지원 정책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 한국 정부 및 그것을 주도하는 남한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자기정체성 확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 체계로 교육시키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른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개인중심의 가치체계를 접해 볼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토통일 이후 통일교육은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체계에 적응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시장경제 및 민주정치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이 개편되어야 하고, 북한 지역에 단계적인 시장경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 및 영리추구의 합리성을 인식시키는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집단주의의 장점과 개인주의의 장점을 융합 강조하는 민주정치교육이 각종 정부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sup>53)</sup> 이러한 처방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실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북한지역에 이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들을 도

53) 상계서, P.32.

입,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재개발 및 교육자들의 양성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통일은 교육에 의해 촉진되며 가장 마지막에 가서도 교육에 의해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社會·文化統合이 될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두 체제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사회·경제·종교·교육제도 하에서 살아 왔다. 그 결과 핏줄로는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 강한 '우리의식' 또는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 심각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무력으로 강점하는 통일이 아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이 민족 통일의 과제라고 한다면, 먼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남북한 주민이 적어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공존해 나감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문화, 가치정향등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통일된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있다.<sup>54)</sup> 문화는 접촉과 교류 속에서 이입된다. 따라서 문화동질화 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남북한 사회간의 문화접촉의 기회확대라 할 것이다. 주민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제3국에서의 회의, 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접촉을 시도해야한다. 언어의 재통일, 전통문화의 재확인, 그리고 새 시대의 생활방식의 균일화 등을 부단히 추진해

54) 윤덕희·김도태(199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사회·문화적 동질성 중대방안 중심", 민족통일연구원, PP.124-156.

야 한다.

통신이 허용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문화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발달된 영상매체의 문화동질화 위력을 감안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동질화도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텔레비전에 의한 40년 간의 문화통합 노력으로 큰 무리없이 통독에 성공했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북한에 '주민은 있어도 시민은 없다'라는 말처럼 통일한국 구성원의 절반은 시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통일한국의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작업이 바로 사회·문화통합인 것이다.

사회·문화통합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예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은 무엇인가 등의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방향이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이후전개되는 사회통합 실상을 세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 V. 結 論

人類歷史에 있어서 21世紀는 오늘날 산업사회가 토대가 되어 과학기술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예상되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의 사회가 될지 예측이 어렵게 되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시대·사회가 될 것이다.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첨단 정보화 사회,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경제 중심의 사회, 제도와 관행 특정 집단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진 사회, 다양성의 사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 국제화·세계화가 심화되며 종래의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 태평양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에 의한 제반 현상과 함께 지금보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놀랄 만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 세계화되고 지방화 되는 가운데 통일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21세기는 앞서의 원인들에 의해 인간의 문제에 더욱 심각성을 던져 주게 될 것이며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안된다면 낙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를 슬기롭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이 어떻게 이에 對備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21世紀에 對備하는 倫理·道德教育은 성격상 두 가지 요소를 갖는데 하나는 21세기를 바람직한 사회가 되도록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고쳐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에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익혀 가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는 교육은 이 두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데 우선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의 과제를 보면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덕목은 생활하는 도덕 훈련이다. 최소한의 기본덕목이 습관화되도록 훈련 하므로써 사회의 기본 질서가 갖추어질 것이며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보면 이 타율적인 요소의 충실함을 통해 자율적인 요소가 발달하게 된다. 둘째는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과 실현이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21세기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등장함으로써 가치관에 갈등을 일으키고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관 교육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윤리·도덕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는 윤리적 사고력의 신장이다. 21세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등장하므로 기존의 규범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의미 있게 처리하기란 곤란하다. 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많은 가치 갈등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성, 합리성, 공감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지식을 처리하고 문제를 탐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21世紀에 對備하는 倫理·道德教育의 內容은 우선 모든 경우의 교육 형태에서 그 기본바탕이 되는 價値와 道德으로서 孝, 正直, 誠實, 信義, 信賴, 寬容과 사랑(愛)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체계적 측면에서 인간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들 수 있다. 인간성 교육은 인간본성을 발견·육성하는 것과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간성 회복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 교육이 중요하다. 나아가서는 환경교육·문화교육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인간의 중요성, 기본질서, 자유사회 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 결정의 4가지 요소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더욱 자율적이며 참여적인 발전된 민주사회에 적응하

고 또 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은 한국교육 특징적인 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교육은 기존의 통일 개념을 재정립·인식하고 통일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치·경제와 사회·문화 각 분야의 통합을 대비하는 지식과 의지, 실천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통일과정 통일 후의 통합 휴유증 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1) 광병선(1994), 『민주시민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2)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3) 김정동(1980), 『현대의 사회학 : 사회학적 관심』, 문우사.
- 4) 김영배외(1989), 『현대사회와 윤리』, 서광사.
- 5) 김정환(1980), 『민족과 교육』, 박영사.
- 6) 김태길(1978), 『윤리학』, 박영사.
- 7) 리처드 니어비(1967),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1988), 대한기독교서회.
- 8) 맹용길(1992), 『자연·생명·윤리』, 임마누엘.
- 9) 박인희외(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자료집』한국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 10) 소홍열(1985), 『윤리와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1) 신.구약 성경 신명기, 에베소서.
- 12) 아놀드 로드스(1970),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석(The Migty Acts of God)』,  
문희석.황성규, 공역(1977), 대한기독교 출판사
- 13) 양호민외(1992), 『남과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 14) 위거찬(1983), 『기독교 윤리』, 형설출판사.
- 15) 이규호(1989), 『현대인을 위한 10가지 덕성론』, 문우사.
- 16) 이상복외(1994), 『철학과 현실·가족윤리 긴급진단』, 철학문화연구소.
- 17) 이상우(1993), 『함께사는 통일』, 나남
- 18) 21세기 위원회,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 출판부

- 19) 장상호(1982), 『인간주의 교육』, 박영사.
- 20) 정범모(1979),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 21) 정세구외(1993), 『동아시아 연구 논총 제 4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22) 정세구(1983), 『국민윤리 교육론』, 교육 과학사
- 23) 존듀이(1994),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교육과 학사.
- 24) 황태연외(1994), 『민주시민 교육』, 논문집, 한국 정치학회.
- 25)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 3, 서원.
- 26) 홍순정(1989), 『어린이의 사회 도덕성 발달』, 창지사.

## 2. 論文 및 기타 文獻

- 1) 강재륜(1991), "일본의 수신과와 도덕교육", 『현대사회와 윤리』 대왕사.
- 2) 국민윤리편집위원회(1993), "산업사회와 윤리", 국민윤리 편집위원회, 대왕사.
- 3) 김갑철(1991), "도덕성 회복과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
- 4) 국방부(1995), "세계화, 새로운 도약", 월간국방, 국방부.
- 5) 구영록(1993), "한국의 국가이익과 통일정책", 나남.
- 6) 권이종(1994), "현대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교육월보, 교육부.
- 7) 권세기(1993),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P.89.
- 8) 김영수(1994),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주대 동아시아 연구소.
- 9) 김병로(1995), "세계화와 통일한국", 『계간사상』, 한국사회과학위원회
- 10) 김종철(1989), "우리나라의 교육목적과 가치관교육", 『가치관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 11) 김종두(1995), "효를 바탕으로 한 장병 인성교육", 국군홍보관리소.



- 12) 김택환(1987),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13) 김항원(199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저해요인과 그 극복방안".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14) 김형철(1995), "문화위기와 도덕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 15) 남궁달화외(1994), "세계화시대의 도덕교육", 월간교육, 4월호 교육부.
- 16) 남정걸(1994), "현대 청소년의 생활 세계", 교육월보, 교육부.
- 17) 박용경(1993), "환경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기독교 윤리학적고찰",  
동아시아연구소.
- 18) 박준서(1984), "하나님 · 인간 · 자연 그 상호관계", 『구약개론』,  
기독교방송.
- 19) 배희정(1991), "비행청소년 범행 및 가치의식 조사를 통해본 선교의 과  
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20) 손봉호칼럼(1994), "도덕성 회복과 사회적 압력", 간행물 윤리협회
- 21) 이동훈(1989) "개인의 도덕성 발달이 사회적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22) 윤건영(1991), "21세기를 대비하는 도덕 ·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도덕  
국민윤리과 교육학회, P.321.
- 23) 윤덕희 · 김도태(1992), "남북한사회 · 문화 공동체 형성방안:사회 · 문화  
적 동질성 중대방안 중심", 민족통일연구원.
- 24) 이병진외(1994), "우리사회 이대로 좋은가?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한  
국국민윤리학.
- 25) 이병진(1994),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 한국 국민윤리학회.
- 26) 이병진(1987), "한국교육자상 정립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교원대학교수  
논총 제3집.

- 27) 이상우(1995),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통일 한국의 미래상", 동아시아연구 논총 제5집.
- 27) 장향희(1985), "청소년비행과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28) 전득주(1994),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의 평가와 발전방향", 민주시민교육.
- 29) 정세구(1993), "21세기에 대비한 일본의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육", 93 후반기 학술 세미나.
- 30) 정세구(1987), "국민윤리 교육의 미래적 성격과 과제", 『국민윤리연구』, 한국국민윤리연구학회.
- 31) 정세구의(1993), "21세기에 대비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윤리·도덕교육",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32) 조영달(1994), "공동체의식과 시민교육", 서울대학교, 시민교육연구실.
- 33) 차경수(1989), "한국 사회의 가치 상황과 갈등", 『가치관 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 34) 최동규(1990), "청소년 성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35) 최현섭(1992), "미국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의 『현대 민주시민교육론』 평민.
- 36) 하인호(1987), "현대 산업사회의 가치관교육", 『국민윤리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37) 한국교육개발원(1994), "21세기에 요구되는 한국시민의 자질", 『민주시민교육』,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38) 한백연구실(1993), "통일 한국의 당면과제 예측:사회문화 분야", 『포럼21』 제8집.

- 
- 39) 황정규(1989), "미래사회의 가치관", 『가치관 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 40) 홍기형외(1994), "월간 오늘의 청소년",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Summary

## A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to Young People, Prepare for the 21C

Shin, Hoo -Oin

Th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We are in the dawn of new age. Human society is amazingly progress of scientific technology revolutionary changes occur in many fields as well as information network. Considering of these changes we predict that 21st century will be the age of Asia pacific. This means that the age of the atlantic will be over and the age of the pacific will begin. humane education of adolescence is important in order to confront with the changes of the ages because the adolescence will be leader in the future society.

So such a progress of scientific technology cause the focus of all values to be in humane and, the change of society obviously don't result in phenomena , the education of humanism to confront with this, lead future society to be good.

The education of ethics to confront with 21st century that will change the problem of humanism is to correct today's negative phenomena for today's society to be ideal.

Our works of 21st century are recovery of humanism, realization and formation of a viewpoint of values and expansion of the power of ethical thoughts. An ability of solving the problem of involvement, reasonability, sympathy must be trained because anomie concerning of survival - polity, economy, culture, environment, union, etc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5

# 감사의 글

작은 기쁨보다는 어려웠던 기억이 앞섭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틈틈이 용기를 주시고 여러가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고성준 교수님의 노고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本科 모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열매를 맺기까지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써 용기를 준 아내와 많이 자란 딸 민영이의 고마움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해주심을 늘 감사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995년 7월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 호 인